

01

2023 국가 7급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능력을 중시하는 인간관에 기반한 이론으로, 행위자들이 이기적 존재임을 전제한다.
- ②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으로 인해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
- ③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합리성은 제약된다고 본다.
- ④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

- ② (X) X-비효율성이란 조직 내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근무태만, 무사안일, 사기저하 등과 같은 행정관리상의 비효율성입니다. 정부가 독점적 이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압박을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입니다(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 X).
- ③ (O) 주인-대리인이론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부족 등 상황적 제약 때문에 합리성이 제약된다고 봅니다.

정답 ②

02

2023 국가 7급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 ② 정책영향평가는 사후평가이며 동시에 효과성 평가로 볼 수 있다.
- ③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에 속하지만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이다.
- ④ 형성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② (O) 영향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 또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향평가도 집행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고, 집행종료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집행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③ (O) 과정평가에는 형성평가와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정부개입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검증도구이며, 평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 자체입니다. 모니터링은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라는 점에서 형성적 평가와 구분됩니다.
- ④ (X) 형성평가는 정책 프로그램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정성과 수단 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합니다. 정책집행이 끝난 후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하고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정책 효과(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입니다.

정답 ④

03

2023 국가 7급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강제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며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
- ② 평가의 집중화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③ 평정대상 다수가 우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들을 배정하는 것이다.

해설

- ① (X) 강제배분법은 관대화 경향(인간관계를 고려해 너그럽고 후한 평정을 하는 것)에 따르는 평정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평정자가 미리 강제 배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이른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 ①

04

2023 국가 7급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공식·비공식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틀이다.
- ②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구조적인 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인지의 과정에 의하기보다는 공식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
- ③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 의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행정부처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며,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 ④ 정책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해설

- ② (X) 하나의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공식기관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적합성과 구조적인 틀에 의존하는 상호인지의 과정으로부터 결정됩니다.
- ④ (O) 폐쇄적인 하위정부 모형이 설명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제시된 새로운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하나가 정책공동체 모형입니다. 정책공동체 모형에서도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특정한 하위무대 또는 전문화된 정책무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은 하위정부 모형과 유사합니다.

정답 ②

05

2023 국가 7급

다음 대화에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사람은?

- A: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인데, 닛지이론은 공공선택론이야.
- B: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라는 목표를 가지는데, 닛지이론은 행동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야.
- C: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닛지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지.
- D: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기업가가 되길 원하지만 닛지이론에서는 선택설계자가 되길 바라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해설

A (X) 신공공관리론의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이고 닛지이론은 행동경제학입니다.

※ 신공공관리론과 닛지이론의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론	닛지이론
이론의 학문적 토대	신고전학과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경제학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부 역할의 이념적 기초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 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설계자
정부 정책의 목표	고객주의, 개인의 이익 증진	행동 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 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닛지
정부개혁 모델	기업가적 정부	닛지 정부

정답 ①

06

2023 국가 7급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 level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에 대한 재량권 강화는 집행현장의 특수성 및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 ② 일선관료는 만성적으로 부족한 자원, 모호한 역할 기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라는 업무환경에 처해 있다.
- ③ 일선관료는 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④ 일선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는 존재로,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해설

- ③ (X) 일선관료제이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사용하는 적응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여 인식하고(segmenting the population), 특정 계층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다는 점입니다(일반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 X).

정답 ③

07

2023 국가 7급

집권화와 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권화는 조직의 규모가 작고 신설 조직일 때 유리하다.
- ② 집권화의 장점으로는 전문적 기술의 활용가능성 향상과 경비 절감을 들 수 있다.
- ③ 탄력적 업무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 ④ 분권화는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회피할 수 있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집권화의 형성요인으로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② (O) 특정한 활동의 전문화가 필요할 때 집권화가 일어납니다.
- ③ (O) 조직이 처한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할수록 많은 결정을 해야하므로 분권화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 ④ (X) 분권화되면 업무 조정이 곤란해지고 업무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④

08

2023 국가 7급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책임회피의식과 보수적 사고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 ㄴ.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 ㄷ.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 ㄹ.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 ㄱ. (O) 만족모형은 현상유지적·보수적 성격으로 쇄신적 문제 해결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ㄴ. (X) 선택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만족에 대한 기대수준 명확히 규정 X).
- ㄷ. (X) 하위조직 간 관계에 집착해 상하관계를 주로 다루는 권력을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점은 회사모형의 단점입니다.
- ㄹ. (O)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은 후 검색을 중단하면, 검토하지 않은 대안 중 훨씬 중요한 대안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보다 분석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손쉬운 예로서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답 ②

09

2023 국가 7급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방법인 추세연장(extrapolation) 예측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상하는 방법이다.
- ②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는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교차영향행렬(cross-impact matrix) 분석이 있다.
- ③ 지속성(persistence), 규칙성(regularity), 자료의 신뢰성(reliability) 및 타당성(validity)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④ 추세연장 예측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가 주로 사용되며, 인구감소, 경제성장, 기관의 업무량 등을 예측하는 데 이용된다.

해설

- ① (O) 추세연장적 예측방법들은 과거, 현재,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사회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② (X) 추세연장적 예측방법으로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등이 있으며, 교차영향행렬은 직관적(판단적) 예측기법입니다.
- ③ (O) 추세연장적 예측은 지속성, 규칙성, 신뢰성과 타당성, 이 세 가지 가정에 기초를 둡니다. 지속성이란 과거에 관찰된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가 과거에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왔다면, 이러한 지속적 경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규칙성이란 만약 과거에 관찰된 변동이 비지속적 패턴으로 발생했다면, 이는 미래에도 되풀이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7~8년마다 경제신장과 긴축의 주기가 일어났으면 미래에도 그 주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은 지속적 경향에 대한 측정과 비지속적 패턴의 측정이 신뢰할 수 있고 제대로 측정(타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답 ②

10

2023 국가 7급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ㄱ. 켈리(Kelley)는 소외적 추종자(alienated followers), 순응적 추종자(sheep), 수동적 추종자(yes people), 효과적 추종자(effective followers) 등 네 가지 추종자 유형을 제시하였고, 그 중 소외적 추종자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ㄴ.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team management) 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제안하였다.

ㄷ. 상황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중 하나인 피들러(Fiedler)는 리더-구성원 관계, 직무구조, 직위권력 등 3가지 변수를 중요한 상황요소로 설정하였다.

ㄹ.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로 설명하며 가장 훌륭한 리더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주도와 배려를 갖춘 균형잡힌 리더형태로 보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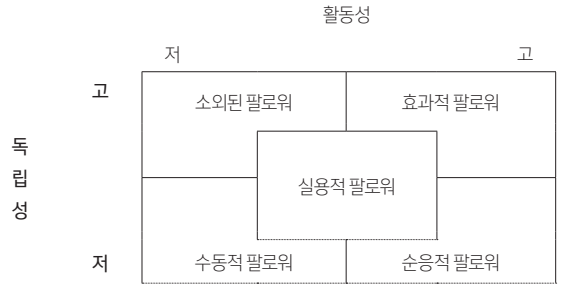
ㄱ. (X) 켈리의 팔로워십에서는 팔로워를 독립성과 활동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5가지 유형[소외된 팔로워(alienated follower), 순응적 팔로워(conforming follower), 실용적 팔로워(pragmatic follower), 수동적 팔로워(passive follower), 효과적 팔로워(effective follower)]로 구분하였습니다. 조직을 분열시킬 잠재적 위험성 가지고 있는 소외된 팔로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ㄴ. (O)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ㄷ. (X) 오하이오(Ohio)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구조설정(구조주도)과 배려의 수준이 높을 때(중간 수준 X) 추종자들의 불평 수준과 이직률은 가장 낮고,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습니다.

※ 켈리(Kelley)의 팔로워십(Followership)

- 1) 켈리에 따르면 “리더는 20%만 기여하고, 부하에게 80%의 기여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강조함
- 2) 팔로워의 유형과 효과적인 팔로워: 팔로워를 독립성과 활동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5가지 유형으로 구분



- (1) 소외된 팔로워(alienated follower): 리더와 조직운영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존재(적극적인 활동 부족) → 조직을 분열시킬 잠재적 위험성 가지고 있음
- (2) 순응적 팔로워(conforming follower):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독립적인 비판능력 부족(속칭 “Yes People”) → 리더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
- (3) 실용적 팔로워(pragmatic follower): 상당히 독립적인 비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직활동에도 평균적인 수준으로 참여함(속칭 ‘눈치꾼들’, 정부관료형이라 부름) → 조직을 가장 덜 위험하게 하지만, 조직의 변화·혁신을 방해함
- (4) 수동적 팔로워(passive follower): 독립적 비판력과 판단력이 없고, 조직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음 → 조직 내 역할 미약, 책임감도 부족
- (5) 효과적 팔로워(effective follower): 독자적인 판단력과 비판의식을 발휘할 줄 알고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 → 리더의 임파워 전략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정답 ③

11

2023 국가 7급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의·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수정할 수 있지만, 예산안의 경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제출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법률안은 대외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효력을 갖는다.
- ④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 ② (O) 헌법 제57조
- ③ (O) 법률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나, 예산안은 공포의 절차와 관계없이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행정부는 이를 공고합니다.
- ④ (X)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53조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④

12

2023 국가 7급

행정 PR(public relatio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②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투입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에 반하는 것이다.
- ③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계몽적·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 ④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법적 의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일방적·명령적이어야 한다.

해설

- ④ (X)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행정PR의 의무성). 행정 PR은 개별적인 정책의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일반대중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모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조직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천적인 활동으로 이해됩니다(일방적·명령적 X).

정답 ④

13

2023 국가 7급

우리나라의 공무원 복무와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급여의 불이익은 없다.
- ③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1/3을 삭감하는 처분이다.

해설

- ① (O)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 ② (X) 중징계의 일종인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연금급여)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③ (X)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어떠한 경우에도 X).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④ (X)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입니다(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X).

정답 ①

14

2023 국가 7급

정부 간 관계와 지방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Wright)는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를 3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 ② 엘코크(Elcock)가 제시한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제약을 받는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없다.

해설

- ② (O) 엘코크의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모형입니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X)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입니다. 지방의회가 그 사무의 처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④

15

2023 국가 7급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재정제도는?

- ① 재정준칙
- ② 총액계상
- ③ 총사업비관리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

해설

- ① (X)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도입할 준칙은 재무준칙(국가채무 비율 기준 60%), 수지준칙(통합재정수지 기준 △3%)입니다.
- ② (O) 「국가재정법」 제37조
- ③ (O) 「국가재정법」 제50조
- ④ (O) 「국가재정법」 제7조

정답 ①

16

2023 국가 7급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결정의 내용은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하는 규범적 처방이 된다.
- ②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으로서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 ③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은 하향적 접근방법입니다.

- ③ (X) 정부 및 민간 프로그램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입니다.

정답 ③

17

2023 국가 7급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ㄴ.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 ㄷ.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 ㄹ.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해설

- ㄱ. (X)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관에 하나만 설립 가능합니다(복수의 협의회 설립 X).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 ㄴ. (O) 「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ㄷ. (X)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 ㄹ. (O) 「국가공무원법」 제29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정답 ③

18

2023 국가 7급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하며,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은 제외된다.
- ②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 ③ 국가채무는 크게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한다.
- ④ 채권의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일 때는 국채,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지방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① (X) 「국가재정법」 상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③ (O)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합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 금융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주택기금 등 향후 회수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할 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는 채무입니다.

정답 ①

19

2023 국가 7급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백지신탁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해설

- ① (O)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8
- ② (O)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X) 백지신탁은 이해충돌이 존재하는 주식을 신탁회사에서 신탁자(공직자)가 모르는 주식을 주식으로 처분해 이해충돌이 없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X).

정답 ④

20

2023 국가 7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하여야 할 재산이 국채, 공채, 회사채인 경우는 액면가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포함된다.
- ③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 ④ 교육공무원 중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아니다.

해설

- ① (O)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 ② (X)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제외됩니다.
- ③ (X)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 ④ (X) 대학교 학장은 재산등록 의무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義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6.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①

21

2023 국가 7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지방의회는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 ② (O) 「지방자치법」 제103조
- ③ (X)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정답 ③

22

2023 국가 7급

재정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투명성이란 재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2007년의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예산과정의 공개’, ‘재정 정보의 완전성 보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 ③ 「국가재정법」에서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매년 1회 이상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④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 ① (O)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은 정부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O) IMF는 재정투명성 기준에서 정부의 예산활동,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예측정보를 적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IMF 재정투명성 규약은 4개 일반원칙(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료성, 예산과정의 공개, 정보의 공공 이용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보장)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 ③ (X)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공표합니다.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④ (O) 「국가재정법」 제100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23

2023 국가 7급

정부신뢰 및 시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도덕성 확보, 정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신뢰의 구성인자이다.
- 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 ㄷ.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속의민주주의의 사례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해설

- ㄱ. (O) 정부신뢰는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이 시민들 자신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바를 정책활동에 반영하려는 의향과 반영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확보, 정책내용의 일관성, 전문성 등이 필요합니다.
- ㄴ. (X) 신뢰의 종류에는 신탁적 신뢰(fiduciary trust)와 상호적 신뢰(mutual trust)가 있습니다. 신탁적 신뢰란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주인이 대리인을 전폭적으로 믿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뢰입니다. 상호적 신뢰는 반복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인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교환과 대면접촉으로 신뢰가 형성되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 ㄷ. (O) 속의민주주의란 속의(속의: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공론조사는 속의민주주의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정답 ②

24

2023 국가 7급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 ② 내국세 및 교육세의 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다.
-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서 비롯되었다.
- ④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②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 ④ (X)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수도권외 지방정부는 다수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수 있으나, 비수도권의 지방정부 재정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방정부와 재원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입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 X).

정답 ④

25

2023 국가 7급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처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ICT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것은?

- ① 혼합현실(mixed reality)
- ②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③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 ④ 제3의 플랫폼(the 3rd platform)

해설

- ① (X) 혼합현실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추가하는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추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② (O) BPR이란 비용, 품질, 속도와 같은 현대조직의 핵심적인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고하여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업무수행을 원점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여기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근본적인 조직성과의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③ (X) 정보자원관리란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보자원(계획, 예산, 조직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제를 의미합니다.
- ④ (X)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머신러닝, 소셜, 모빌리티 등이 제3의 플랫폼 기술들입니다.

정답 ②